

오르는 월세·식비에 학기 중에도 ‘알바’ 뛰는 대학생들

대학가 원룸 월세 75만원 수준
중앙대, 기숙사 경쟁률 2.2대 1
성균관대 ‘천원의 아침밥’ 운영
이화여대, 학식 단품위주 구성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개학기 대학생들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아르바이트 구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가 원룸 월세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으며, 외식 비용도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9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6%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알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동일 조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2021년 67.8%, 2022년 58.0%으로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알바천국은 “올해 대학가 알바 구직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대면 강의가 재개된 만큼 구직 활동 더 활발해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비가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내식당 밥값까지 올라 편의점 음식을 먹는 등 저렴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대학생들도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13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줄 서 있다. /뉴시스

질 전망이다.

대학생들의 알바 구직 이유는 ‘학기 중 생활비 및 용돈 마련(84.2%,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 경험,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29.1%) ▲유학, 여행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자(24.9%) ▲등록금 마련(20.5%) ▲학기 중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11.9%) ▲공강 시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11.9%) 등이 있었으며, 모두 30% 미만의 선택을 보였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동월 대비 4.

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물가 상승세는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 강의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대학가 원룸 월세도 평균 60만원을 넘어 75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시세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이면서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이화여대 인근이 6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51만7000원) 대비 34% 수준 상승했다.

주거지 부담이 가중되자 기숙사를 찾는 대학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중앙대의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지난해 1.4대 1에서 이번 1학기에 2.2대 1로 상승했다.

주거 비용 부담이 고조되면서 자취생들의 식비 걱정도 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국립대생 노모(25)씨는 “물

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바깥 지출을 줄이고 요리를 시작했다”며 “친구들과의 잦은 약속때문에 알바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식당에서 해결하는 한 끼 식사 비용이 오르자 학식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균관대의 1월부터 3월까지 학식당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인문사회캠(2만8762명)과 자연과학캠(4만4992명) 학식당 식수 총합은 7만3754명이었지만, 올해는 8만5668명(인사캠 3만8080명, 자과캠 4만7588명)으로 전년 대비 16.15% 상승했다.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자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 역시 “학식당들의 강력한 가격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최대한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리모델링해 새로 오픈하는 식당 역시 단품 위주로 구성해 저렴하게 책정하고자 했다”고 학생들의 식비 고충에 공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신뢰도 낮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되나

학폭근절·피해자 회복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순신 사태에 국민들 경악
학폭 피해자 보호기간 한 곳 뿐”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나면서 학폭가·피해학생 대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학폭 대처 관련 떨어진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하며 다시 학폭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 보호 기관은 단 한 개”라며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폭 피해자 보호 시설이 부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하다. 조경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해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폭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학생들에게 연결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아름 학폭 전문 변호사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는데도 학생들은 제도를 못 믿고 있다”며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가해·피해학생 모두 불복을 제기하고,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를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과 가정환경, 경제적, 권력 여부 이런 것들이 결과에 활용되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폭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입증한 셈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전에는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이듬해인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시 최대 2년간 보존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초기에는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신체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을 지원하고 인성 교육을 통해서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총장 항의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전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의혹 해소의 책임이 있는 서울대의 행태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동대문에 500평 규모 패션쇼장 연다

팝업스토어·라이브커머스 등 가능

서울시는 오는 15일 침체된 동대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중구 마장로 22 DDP 패션몰)를 패션산업 복합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해 개관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시설의 규모는 1609㎡(약 500평)이다. 패션쇼와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 수 있는 개방형 통합공

간과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 6~20인 규모의 회의실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2009년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면서 “2021년 17기 디자이너 배출을 끝으로 낙후된 시설 보완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능과 공간으로 재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 평가 ‘전국1위’

인천 2개 수행기관 장관상 수상도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조기등록 추진 평가 분야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국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곳이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천300여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낸 전국 5개 기관이 선정됐

는데 그중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1위와 2위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또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한 7개 기관은 상위 60개 기관에 추가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의 5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일자리 사업계획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면, 참여희망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 ‘25곳 골목상권’ 제2의 힘지로 만든다

자치구별 1곳씩 최대 1억원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곳씩 총 25개의 골목상권을 선정해 각 대상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상인들이 상권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인 조직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휴게공간도 확충한다.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기 좋은 조형물, 포토존, 거리디자인 등 공간 연출을 지원해 시민들의 방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기자